

의안 번호	2232	[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]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2. 29.(목) 김도운 의원 외 8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9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3. 14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김도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 (2020. 6. 9)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 (현행)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
(변경) 울산광역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
- 자구 수정 등 정비를 통해 조문 현행화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 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 (2020. 6. 9) 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 하고자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지능 정보화 기본법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·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·이용할 때 안전성·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·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

지능 정보화 기본법 시행령

제3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,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장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중앙행정기관의 장: 매년 5월 20일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: 매년 9월 10일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1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
 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